

2020 년 국가인권보고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요약

공지: 국무부는 본 보고서 6 절 하부 항목인 여성 관련 내용에 추가하여 생식권 (재생산권)에 관한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부속 자료를 2021 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 체제로 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이다. 2017 년 치러진 대선과 4 월 15 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조기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경찰청은 육상에서의 국내 치안을 담당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문민정부는 보안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중대한 인권 현안으로는 대북 전단 및 기타 자료 살포 금지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존재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군대 내 성인 병사들의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이 있다.

정부는 권력 남용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 조치를 취했다.

제 1 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정부나 정부산하기관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대검찰청은 민간 보안 조직에 의한 살인이 정당한지 여부를 수사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소를 할 책임이 있다. 군인에 의한 살인은 헌병이 수사한다.

B.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하거나 정부 당국을 대리하여 행해진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굴욕적인 대우와 그 처벌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 비정부기구인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일부 폭력 사건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군대 내 괴롭힘 사례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국내 비정부기구들은 군대에서의 괴롭힘이 병사들을 자살로 이르게 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 자살 건수가 2017년 51건에서 2019년 62건으로 증가한 점, 특히 중위 이하 하급 장교의 자살이 늘어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군 상관에 의한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대한 비정부기구와 언론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신뢰할 만한 성적 또는 비성적 추행과 폭행 의혹도 제기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군인권센터의 상담전화에는 신체 및 언어 학대, 성범죄 관련 제보가 접수되었다. 군인권센터는 6월 한 공군 간부가 음담패설을 하거나 뒤에서 병사들을 끌어안는 등 사병들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병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해 내용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추행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성추행 제보가 있는 후 군인권센터는 공군과

피해 병사 지원에 나섰으며 공군은 해당 간부를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하였다. 공군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인권교관을 양성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평소보다 대면 교육을 받는 교관 수는 줄었으나 원격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홍보원과 공동으로 인권 교육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군에 배포했다. 가해자의 면책 처분은 군 내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와 관련하여 인권문제가 제기된 중요한 보고는 없었다.

시설 여건: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 가혹행위나 시설 여건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는 없었다.

5월 부산 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수감자가 수감일 다음날 아침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가 쉴새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호출벨을 누르는 등의 이유로 손발을 묶었다고 밝혔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면 밤 늦게까지 깨어있던 수감자가 새벽 4시경 움직임이 줄어든 모습이 포착되었고, 5시 45분경에는 의식을 잃어 7시경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감자는 병원에서 7시 30분경 사망하였다. 법무부 감찰팀은 직무태만, 보호장비 사용 부적정, 야간 의료 처우 부재 등을 사망 요인으로 꼽았다.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취침시간 중 보호장비 해제, 야간 및 휴일에 의료진의 원격 진료 체계 구축 등 개선 지침을 시행하였다.

2019년 LGBTI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법무부는 모든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 차별 금지법을 숙지하고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4월 배포한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시설용 새 지침에 수감자 배정시 수감자의 의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고려할 것을 포함시켰다.

행정: 법무부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수감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구제절차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수감자는 법무장관에게 직접 청원하거나 법무부 산하 인권침해신고센터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독립적인 감시: 교도소 시설 접근과 관련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정부기구들은 인권 침해 신고 사건 조사를 위해 교정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 요건을 준수했다.

1948년 이래 시행 중인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의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비정부기구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을 위협하고 구금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에 의거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수사한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부실한 감독 체계로 인해 국정원이 임무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발부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국은 자진출두한 자를 경찰서에서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구속 후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금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영장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크메르어, 우르두어, 미얀마어를 포함한 15개국어로 발부하고 있다.

보석 제도가 있다. 재범자, 도주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자,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법으로 보석을 허용하고 있다.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석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재판 기간 중,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판 전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랐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했다.

재판절차

헌법은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은 무죄추정의원칙, 진술거부권, 필요한 경우 무료로 통역을 제공받아 혐의 내용을 즉시 통보받을 권리, 변호사 접견권 (필요한 경우 국비 지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정 출석권, 항소권 등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된다. 피고인에게는 소급 적용 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보장되나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법적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판사가 동의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반드시 피고의 사전신청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증인에 대해 교호신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자백하거나 진술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법무부는 현재 정치적인 신념을 이유로 수감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양심적 병역거부, 쟁의 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월 1일 대체복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 시설에서 36개월동안 복무하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병역 거부자들은 3년이하 징역형을 받았다. 대체역심사위원회는 6월 30일 대체복무 신청 심사를 시작하였고, 8월 현재 224건의 대체 복무 신청을 받아들여 10월부터 복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새 법이 과거 제도보다 진일보임에는 분명하나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 군복무 기간이 2년이 채 안되는 것에 비해 대체 복무 기간이 징벌적이라는 점 등 여러 면에서 국제적 규범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국방부 산하가 아닌 100% 민간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은 신도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 3 명이 이들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18 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새 법이 1 월에 발효되기 전 군 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293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한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8 월 현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검토 중이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 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는 국내 인권 기관과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침해

그러한 침해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법에 의해 정부가 범죄 수사의 경우 최장 2 개월,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 개월 간의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규정되어 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7 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 개월 간격으로 주요 활동 사항, 여행 계획, 가족 관계, 직업, 재산 상태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청취와 북한 위성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북한에서 출간된 서적을 읽는 행위는 정부가 그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 및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금지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읽거나 조선중앙통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없다. 그러나 본 금지 규정의 집행 사례는 드물었다.

방역법에 의거해 정부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접촉자 파악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위치나 신용카드 거래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영장없이 얻을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 대다수 시민들은 이같은 사생활 침해를 공공 보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또한 접촉자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였다. 서울의 LGBTI 성소수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일부 인물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였다. 또한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일부 사업장에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도록 해 일부 성소수자들은 신원을 드러내는 정보 제공을 꺼리기도 하였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낙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 권리 단체들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한 필요성 간 균형을 맞춰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일부 종교 단체는 정부의 사생활 침해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9년 12월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민간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제 2 절. 시민의 자유의 존중

A.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체로 이를 존중하였다. 독립적인 언론, 효과적 사법부,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 정치 제도가 결합하여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였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률,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시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가했다.

12월 14일 국회는 사전 승인없이 현금이나 한국 뉴스, 다큐멘터리, TV 드라마 등이 담긴 디지털 저장 장치와 같은 물품을 비롯해 대북 전단이나 기타 자료를 남북한 접경 일대에서 북한으로 살포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29일자로 공포되고 2021년 3월 30일에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위반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통일부는 해당 개정안의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권 단체와 야당 지도자들은 해당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제기된 우려사항을 “바로 잡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국가 안보 문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대북전단지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2016년 대법원 판결과 2014년 대북전단지 살포 이후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한 사건을 들며 개정안을 옹호하였다. 12월 22일 통일부는 해당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해석 지침을 내놓을 것이며 20일간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 시행 이전에 지침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살포 비정부기구 2곳에 대한 설립 취소 관련 사항은 제 5 절 참조).

표현의 자유: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명예훼손법 및 국가보안법에 입각하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월드리포트 2020에서 명예훼손법,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을 예로 들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6월 대전지법은 단국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남성에게 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 (\$423)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증언한 대학 관계자는 대자보로 인한 물리적 피해도 없었고 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남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간주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언론과 매체의 자유: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제한범위 내에서 다양한 관점을 표현했다.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동법은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다. 비정부기구 및 인권 변호사들은 일부 정치인, 정부 관리, 유명 인사들이 동법을 이용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의 폭로를 저지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8월 서울 항소심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판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013년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당선 후 2017년 검찰이 처음 고씨를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 보수 단체는 고씨의 무죄를 뒤집은 해당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고위 공직자를 비판할 자유가 튼튼한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정하는 법과 상충되는 결과라고 규탄하였다.

국가 안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지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인을 체포하고 수감하거나 외국인을 추방하는 근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1992년부터 총 7차례,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다. 9월 현재, 국가보안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새로운 이의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가보안법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제약을 비판하며 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기소 건수는 2015년 이래 급감하여 2015년 40건, 2016년 17건, 2017년 14건과 2018년 2019년은 각각 3건을 기록하였고 당해연도 1월에서 6월까지 3건이었다. 비정부기구는 최근 기소된 사건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했으며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권한을 근거로 이메일과 인터넷 대화방을 감시했다.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총 20만 6천 759개의 사이트를 차단한 데 이어 1월부터 6월까지 유해하다고 판단된 10만 1천 139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는 주로 도박, 불법 식품 및 약물, 음란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와 트위터에 게시된 북한 체제 선전물도 차단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불법이다. 접속이 차단된 웹사이트 중에는 신체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문서 위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살을 조장하는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혹은 채팅방에 게시된 글에 불법·유해 정보로 규정된 콘텐츠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금지된 게시물이 발견된 경우 정부는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다. 금지된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

대형 웹사이트에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릴 때 실명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교사에게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치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노래의 가사 등을 심의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노래를 금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및 인터넷 통신에 관한 윤리 기준을 유지, 관할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법에 의거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았거나 과거 폭력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일부 시위를 금지했다. 경찰청의 시위 금지 결정은 행정적·사법적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8월 현재 경찰은 총 8만 2천 433건의 집회 신청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1천 562건을 불허하였다. 불허한 집회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의 일환인 대중 모임 제한에 따른 것이었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D. 이동의 자유

국내 이동, 해외 여행 (북한 제외), 이민, 송환의 자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해외 여행: 북한을 방문하는 시민은 반드시 통일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북 희망자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 사전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 국내 실향민의 지위와 처우

해당사항 없음.

F. 난민 보호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의 제한적 협력을 통해 난민, 복귀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대상자를 보호하고 지원했다.

이주자, 난민, 무국적자에 대한 가혹행위: 비정부기구들은 신체적 가혹 행위, 여권 압수, 열악한 주거 환경, 성추행 등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행해진 가혹 행위 사례들을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와 활동가들은 인천공항 내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항공사들이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는 출국대기실은 국내 입국이 거부된 자(이주자와 망명 신청자 포함)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들은, 특히 수개월 동안 장기 수용되는 대기자들의 경우 사생활 보장, 침구, 의료시설이 부족한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자들은 개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대기자는 하루 세 끼를 패스트푸드만으로 해결했으며,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여 다른 대기자나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관련 통계가 있는 마지막 해인 2018 년 하루 평균 106 명이 이곳을 이용했으며, 98 퍼센트가 4 일 이내에 출국했다.

2019 년 10 월 당국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8 개월 이상을 체류한 앙골라 출신 부부와 그들의 네 자녀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 가족은 2018 년 12 월 한국에 도착, 앙골라 경찰에 의한 고문과 성폭력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2019 년 1 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가족의 이주 동기가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난민 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 년 6 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권리 운동가들은 이 앙골라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들며 공항에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심리치료 및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9월 현재 이들의 난민 신청건은 계류 중이다.

난민 지원 비정부기구와 활동가들은 공항에서 사전 심사 이후 돌려보낸 난민 신청자 숫자에 대한 공개 자료가 부족한 점을 질타했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별도의 법률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민 또는 망명 통계에 탈북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률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는 탈북자 혹은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했다.

최근 법무부는 산하 10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 심사 담당관의 수를 2018년 39명에서 9월 현재 93명으로 늘렸다. 비정부기구들은 난민 심사 담당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증가하는 난민 및 망명 신청 수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적 이동 제한으로 망명 신청자의 수와 정부의 사건 처리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민 신청자가 입국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에 난민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 건을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난민, 난민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난민 신청자, 단기 인도적 체류자를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82명이었다.

법에 의해 난민 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난민 신청자는 정부에 통역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비정부기구와 난민 신청자들은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안전한 출신국가/경유국: 법은 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박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출신 국가나 안전한 제 3 국”으로부터 온 경우가 포함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문화적·언어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수의 탈북자들과 타국 출신 이주민들은 사회적 차별을 호소했으며 기초 생활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임시 보호: 법에 따라 “난민” 자격(보호의 측면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가 고문으로 인해 위협을 받거나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 1 년짜리 단기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난민에게 제공되는 기본 생활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주거와 기타 생활 지원 면에서 비정부기구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인도적 체류자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군의 종류를 정부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대부분 저임금의 “3D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직종”인 경우가 많았다.

6 월 현재 675 명의 예멘인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이다. 9 월에 법무부는 연장을 신청한 모든 예멘 체류자의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법률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원칙에 기초해 비밀투표로 치러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적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와 4.15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실시됐다. 4월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였다.

정당과 정치 참여: 개인이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릴 경우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을 써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견해 표현과 정보 전달 그리고 선거운동 지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선거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연례보고서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심지어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적 생활 영역에서도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 여성이나 소수자의 투표, 공직선거 출마, 선거 감시, 기타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그들은 그런 활동을 했다.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6월에 선출됨)을 비롯한 여성 의원은 4월 총선에서 지난 국회 17%보다 증가한 전체 의석의 19%를 차지하였다.

제 4 절.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결여

법률은 공직자 부패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간혹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당해연도 중에 다수의 공직자 부패사건이 보고됐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사법 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부패: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5 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3 년차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에는 법무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부패 종합계획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체계의 수립, 군대 내 부패 방지, 그리고 공공 조달 부문의 부패 척결 등이 담겼다. 정부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였다.

1 월 정부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가 연루된 부패 의혹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9 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선출 공직자, 당직자가 연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윤리감찰단을 설치했다. 9 월 18 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당 초선의원인 김홍걸 의원을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당에서 제명했다.

10 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자들의 부패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2019 년 12 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부정 금품 수수,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 기타 범죄혐의로 기소하였다. 6 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조카에게 금융범죄 및 조 전 장관 가족에게 불리한 회사 자료를 은닉, 인멸한 혐의로 징역 4 년형을 선고했다. 조카 조씨는 조 전 장관이 2017 년 임명된 후 정부 부처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은 한 제조업체에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을 투자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부패 의혹이 불거진 2019 년 8 월 이후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9 월 서울 지검은 초선인 윤미향 의원을 사기, 횡령, 직무유기 및 위안부 피해자 지원 비정부기구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시 자금을 유용한 행위와 관련한 기타 혐의로 기소하였다. 9 월 현재 해당 사건 수사는 진행 중이다.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7 년 이래 한국의 부패 지수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정부의 공직자 직권남용 근절 노력, 정치권 부패 감소,

부패 사건 처리 능력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분야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패는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산 공개: 선출직을 포함,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부동산 및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본인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상당한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5 절. 국제 및 비정부 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협조적이고 인권단체의 의견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고 밝혔다. 7월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탈북자 운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가 2018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고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근거를 들었다. 통일부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대북전단지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으로 초래되는 안보 우려를 감당해야 하며, 대다수의 대북전단이 북한으로 가지 못하거나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이자 오염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두 단체가 취소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통일부 조치가 합당한지를 가리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설립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통일부는 8월 북한인권 및 탈북자 정착 지원 단체를 포함, 25개의 통일부 등록 비정부기구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인력부족으로 연기되었던 통상적 행정 점검 절차라고 밝혔지만 잇따른 통일부의 조치가 활동가와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민 사회의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 인권기구: 헌법에 명시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행권이 없으며 위원회의 권고 및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일선 공직자들을 교육하고 공공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 내에는 인권 단체 대표 6 명을 포함하여 위원 9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옴부즈만실은 독립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옴부즈만실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 부처 등 여러 정부 기관들과 협조하고 있다.

제 6 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법률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기간 삽입 행위를 제외한 강간은 "유사강간"으로 분류한다. 강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 3 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은 2 년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부부간 강간을 범죄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률은 강간과 "유사강간"을 폭행이 수반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은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여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6 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최장 2 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는 5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접근 금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과 상당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계 당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또는 교정 치료 및 상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위험이 있고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은 직권에 의해, 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명령에 의해 가해자에게 주거 퇴거 혹은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통신 장비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법률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 재범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를 통해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월에서 9 월 사이 화학적 거세 판결 건수는 없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사법제도는 효과적으로 법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간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명예훼손법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간 사건은 신고와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는 부처간 협의 촉진 및 대책 마련 조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들, 민간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24 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한 8 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8 년 출범한 여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피해 촬영 사진,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증거수집 및 경찰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료 법률 지원 연계와 의료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아동 성착취” 참고)

가정 폭력은 상당하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는 문제로 남아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9 년에 신고된 가정 폭력은 240, 564 건으로서, 2018 년 대비 3 퍼센트 하락했다.

시민단체들과 언론은 외국인 신부에 대한 범죄 및 학대를 계속 알리고 있다.

1980 년대부터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초반에는 중국 조선족, 최근에는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 외국인 여성과 한국 미혼남성을 소개시키는 민간 중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당 보조금이 “부인 매수”나 마찬가지로이며, 외국인 신부들은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남편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리며, 한국내 지지네트워크가 부족한 탓에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2018 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신부의 42 퍼센트가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으며 68 퍼센트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경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 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29 퍼센트가 자신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고 응답했다.

4 월, 첫 만남 다음 날 베트남에서 혼인한 부인을 2019 년 11 월에 살해한 경기도의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은 15 년형을 선고했다. 남편보다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 한국어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여성은 2019 년 8 월 한국으로 이주한 후, 생활방식과 금전문제를 두고 남편과 항상 갈등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이주결혼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9 년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소 5 곳을 열었다. 상담소는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긴급보호시설 운영한다. 법무부는 2019 년 가정 폭력범에게 결혼 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원 스트라이크”정책을 수립했다. 관측자들은 “수사 의뢰 권한” 정책을 추가하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목했다. 해당 정책은 별거 시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관계당국에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2019 년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104 곳,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담, 의료 지원 및 치료, 사회복지사,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39 곳 등 성폭력 상담소 170 곳에 성폭력 신고 총 276,112 건이 접수되었다. 신고된 건은 2018 년 대비 12.6 퍼센트 증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증가가 2018 년 1 월 #미투 운동 시작이후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해 더욱 자진하여 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다.

성추행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공직자가 연루되어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들을 포함하여 1 년 내내 다수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전 비서가 박이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인 7 월

9 일 자살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7 년부터 박 시장은 그녀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그녀가 부서를 이동한 후에도 추행은 계속되었다. 박 시장의 사망 이후, 그녀는 성명을 통해 그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 옆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박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여권(女權) 운동가들과 고소인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박은 여권 운동가로 알려졌고 한국 최초의 성희롱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1993 년 사건의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존경받았다.

오거돈 부산 시장은 부하 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인정한 후 4 월에 사임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를 지원했고, 성평등 교육 및 기타 조치를 통해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제거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8 월,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9 월 현재, 해당 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강압적 산아 제한: 정부에 의한 강압적 낙태나 비자발적 불임 시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차별: 여성은 헌법하에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린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적 피해와 고용차별을 경험했다. (7 절 D 참조)

아동

출생신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태생이 불분명하거나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률은 모든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생 후 1 주일 이내에는 입양을 금하고 있다.

아동 학대: 법률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5 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 년과 2019 년 사이 아동학대신고 건수가 13.7 퍼센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계도 캠페인의 확대와 아동 복지 신고 요건의 확대가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 보건, 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관된 사례 관리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보도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7 월, 강원도의 한 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1 세 영아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1 년 2 월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영아들을 꼬집고 때렸으며, 오랫동안 서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교사 감독 및 학대 예방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벌금 300 만원(2,585 미국 달러)을 선고했다.

조혼 및 강제결혼: 법률상의 혼인가능연령은 남녀 모두 18 세이다. 강제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 성착취: 5 월, 정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을 13 세에서 16 세로 높였고 기타 아동 성범죄에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했다. 19 세 미만의 청소년과 위계·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다. 13 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10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13 세에서 19 세의 미성년자 강간죄는 5 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타 처벌수단으로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있다.

법률은 아동 음란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생산 또는 소지하는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월, 정부는 아동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거나 도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죄는 최저 징역 5 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유포는 징역 3 년, 아동 음란물 소지 혹은 구매는 징역 1 년이다.

5월에 개정된 법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다. N번방이란 온라인 채팅방 관리자들이 여성과 미성년자가 수치스럽고 때로는 폭력적인 음란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채팅방을 의미한다. 3월, 당국은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배포한 "박사방" 채팅방의 운영자 조주빈을 체포했다. 6월까지 당국은 범죄조직에 합류하거나 이를 조직 혹은 운영한 혐의로 37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 74명에게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협박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변기물을 먹거나 가해자의 이름을 몸에 새기도록 강요받았다고 한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이라는 SNS 앱을 통해 착취물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일부 공범자들이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주빈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다크웹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운영자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으로 2018년 기소된 후, 손정우는 18개월 복역했다. 그가 운영했던 웹사이트는 2018년 당국이 압수하기 전까지 콘텐츠 규모 기준 전 세계 최대 성착취물 웹사이트로서, 영상 25만개를 포함하여 8테라바이트 규모의 아동 음란물을 보유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던 전 세계 아동 피해자 수십명이 구출되었다. 여성권리운동가, 아동권리운동가,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음란물 제작·업로드가 촉진되어 아동 착취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법관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송환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아동, 특히 가출 소녀들은 온라인 모집을 포함한 성적 인신매매에 취약했다.

국제아동탈취: 한국은 "1980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 납치에 관한 연례보고서

참조:<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for-providers/legal-reports-and-data/reported-cases.html>

반유대주의

유태계 주민 수는 약 1,000 명이며,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자이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참조:<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장애인

법률은 신체, 감각, 지적, 정신 장애를 가진 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고의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 조사 시 장애인 본인과 가족을 전담하는 검·경 특별 태스크포스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또한 건물,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원활히 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은 계속해서 해당 법률을 무시했으며 구조 변경에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선택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적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이나 자립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성인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했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은 부족했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장애인 6등급 분류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의 취지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장임을 이해하지만 개정이 불충분하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정부예산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고 서비스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및 민간 건물과 시설의 장애인 접근을 증가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장애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1 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했고, 후속 수사 및 개입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 6 월, 점자책, 오디오북 및 기타 장비 등 정부가 제공하는 통신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국립재활연구소 및 7 개 지역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정부는 성인 및 아동 등록 장애인에게 연금을 제공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18 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경증 장애를 가진 18 세 이상의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제공했다.

장애 아동은 3 에서 17 세 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보육기관,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을 위한 장비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구성원

국민 대부분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인구 약 5,184 만명의 한국에는 5 월 현재, 210 만명 (40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부족하다. 3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이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고 했으며, 인종차별을 멈추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촉구를 강조했다.

인권위가 인용한 2019년 유엔 위원회 보고서는 기존의 법이 이주노동자, 망명신청자, 외국인 배우자 등 소수 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수 민족/인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일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법원 직원, 직장 감독관, 출입국 사무소 직원에 의한 차별을 신고했다. 이주민과 귀화인의 상당수가 여성 배우자였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6절 "여성" 참고)

2019년 난민 지위 혹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게 된 예민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이들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이주민 가정 아동들이 차별을 겪고 있으며 한국 아동들에게만 제공되는 보육지원과 같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역시 외모로 인한 괴롭힘을 경험했다

시민단체, 국제기구,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병 초기 대응이 외국인을 차별했다고 진술했다. 초기에 수백만명의 외국인 학생, 이주근로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공급업체가 생산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다.

코로나 19 감염병 초기에,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은 자녀 학교 자퇴 요구, 실직, 식당 입장 거부, 지역사회 낙인을 포함해서 몇 가지 형태의 차별을 경험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이주노동자, 배우자,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인한 폭력 행위, 범죄화, 기타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가 그러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 구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동법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특정하여 금지하고는 있지 않다. 군 형법의 “추행” 조항은 합의에 의한 군인 남성간 성관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남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병역법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군법이 차별을 제도화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체계内的 불이익을 강화하고, 군 내부와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향한 폭력을 자극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군인 색출이라고 언급한 사건의 결과, 8월 성소수자 해군 한 명이 전역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9년 해군은 상담을 한다는 미명하에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했으며 적어도 한 건의 경우 다른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군인 한 명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다. 조사관들이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했으며 동성애 관계의 증거를 찾기 위해 군인의 핸드폰을 뒤졌다고 부연했다. 해군은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군 형법과 국방부 정책에 따라 군기 문란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현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이송 전 “특별 환자”의 이동에 관한 발표 그리고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나머지 수감자들과 함께 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감자의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지게 했다.

제 7 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법률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독립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엄격한 제한범위 내의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법률은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는 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로 규정되는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 항공, 통신, 수도, 병원이 포함된다. 노조법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사측은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 "노동쟁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제 3자 조정을 거치거나 노사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하는 파업은 합법이다. 법률은 "노동쟁의"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력감축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권에 관련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주주들은 쟁의 절차가 과도하게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간주되는 파업에 참가할 경우 주도자와 참가자는 죄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 또는 공직 선거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등 교육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로 인해, 조합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또한, 동법은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률은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한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하고 있다. 노조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과 단체교섭 참가자에 대한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6 월,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용이 허용되는 법이 발효되었다. 예전에는 사용자의 원조 제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노조 운동가들은 이 법을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정부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적법한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률을 전반적으로 시행했고, 처벌도 시민적 권리 거부와 관련된 다른 법들과 비슷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노조의 합법적인 교섭 요구를 거절하는 사업주를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 년 12 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6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했고, 다른 임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위협 계획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간섭 없이 운영된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추방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노조 활동 참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계약직) "파견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쟁의에 참여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위험에 직면했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법률은 모든 형태의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을 금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으나 강제 노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처벌은 납치와 같은 유사 중범죄에 대한 처벌에 상응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취업비용 지불로 인해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부채노예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인 채용 관행,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하루 18 시간 이상 일하는 이주선원들의 열악한 여건을 보고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선원들은 한국인 선장 및 다른 선원들에 의해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당했고, 아플 때도 일하도록 강요당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원양어선은 이주선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8 년 한국 원양어선 선원 73.3 퍼센트가 이주노동자였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여건 조사를 계속했다. 5 월과 6 월, 해양경찰은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단속을 시행했다. 2019 년 유사한 단속을 통해 해경은 인권 및 근로자권리 침해 혐의로 94 명을 체포했다. 이해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간 관할 분쟁으로 인해 단속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정부는 어업에서 종사하는 지적장애인들의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착취 사례를 조사했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C.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 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정부는 전반적으로 법을 시행했다. 중학교 졸업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5~18 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을 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종의 고용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한 최고 처벌은 징역 2 년으로서, 최고 10 년까지 처벌받는 납치 등 유사 중범죄의

처벌에 상응하지 않았다. 9 월까지 정부는 아동노동 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다.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동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제 6 절 “아동” 참조)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법률은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종교, 장애여부를 근거한 고용이나 직업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 언어나 HIV 혹은 기타 전염성 질환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고용차별에 대한 처벌은 유사한 위반과 관련된 법에 상응했다. 직원 30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구직자에게 가족구성원, 출신지, 결혼여부, 나이, 재산소유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법률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관성이 없게 법을 시행했고 성별과 연관된 차별이 발생했다. 2019 년 성별 임금 격차는 32.5 퍼센트였다. 근로자 권리 단체들은 이러한 격차의 이유를 여성의 육아 및 가사 책임으로 보았다. 높은 비율의 여성이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 일자리를 차지했고 출산후 복귀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 고용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근무시간, 직업, 업무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었다. 특히, 법은 광물 채굴과 같은 “위험한” 직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

정부의 제 6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 년)은 차별 없는 근로 환경 구축, 여성 경력 단절 예방,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촉진 등 3 개항으로 구성된 여성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내 괴롭힘 퇴치를 위해 고용주가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 년 조사에서 응답자 70 퍼센트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한 고용주는 벌금과 최고 3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은 근로자의 1/3 을 차지하고 특히 전자, 자동차, 서비스 부문에서 종사하는 (“파견직”으로도 알려진) 하청업체의 근로자, 임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과 언론은 비공식 근로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며 급여 등 혜택 수준이 정규직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보도했다. 일례로, 법은 2 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근무 기간이 2 년이 되기 직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독려를 목적으로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여성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리한 지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HIV/AIDS 감염자,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직장내 차별이 있었다.

많은 이주근로자들도 직장내 차별을 직면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최장 체재 허용 기간은 4 년 10 개월로 이는 영주권 신청에 요구되는 5 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이다. 비정부기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정책이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 자격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제 7.B 절 및 제 7.E 절 참조).

법은 고용주가 한국 국적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한국 선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반면, 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 업계 대표, 노조 대표들이 외국인 직원의 최저임금을 정한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의 임금은 외국인 선원보다 다섯 배 높다. 또한,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 선원은 이익금 배분 자격이 없다.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월급 60 만원(517 미국 달러)만 받는다고 시민단체들에게 보고했다.

법은 모집책, 대리인, 고용주, 관리인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구직자나 직원으로부터 금전, 기타 귀중품, 또는 편익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어선 선주들이 정기적으로 외국인 선원들에게 보증금 지불을 요구하여 이들의 이탈을 막고 있다.

E. 용인가능한 최저 근로조건

당해연도에 최저임금은 2.9 퍼센트 증가했고 공식빈곤선 이상이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용주들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이 실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집에서 "대기 상태"로 표시하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주근로자들에게 숙식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려 했다고 보고했다.

법은 2 주 기간 동안 평균 주간근로시간이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매주 의무적으로 하루를 쉬는 한, (일주일 52 시간까지) 특정한 날에 8 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특정한 주에 40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근무제를 허용한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2 주 동안 근무시간이 80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를 적용한다. 수출가공구역내 외국기업의 경우 주 1 일 휴일을 적시한 노동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법은 일반 근로자의 주간 시간외근무를 12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부문에서 임금 및 용인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지만 이주민들은 차별적 법과 관행에 직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법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고, 대부분의 부문에서 위반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숫자는 충분했다. 감독관들은 안전하지 않은 여건을 파악하고, 불시에 방문하며 교정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위반시 처벌에는 징역과 벌금이 포함되었고, 처벌은 사기 등 유사범죄와 비슷했다.

법률은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담고 있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 특히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건설업 부문도 감독 대상이었다. 이주노동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장들의

적은 비율만 조사한다고 지적했고, 대부분의 조사가 형식적이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시정명령만 내리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노동 기준 위반을 단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는데 다수의 제약에 직면했고 따라서 착취에 취약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고용주 동의없이 이주노동자가 직장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위반사실을 증명하기 힘들고 취약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어떤 고용주는 4 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에게 이 체불 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내면 필요한 동의를 해주겠다고 했다. 다른 사례로, 3 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출신 농업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해당 고용주는 언론에 노동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밀린 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덜 비싸다고 말했다.

3 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에 관한 제한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 월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3 개월내에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법적지위를 상실한다. 당국은 해당자의 취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는 농업 또는 건설근로자와 같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직을 원할 때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직이 더 어려웠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규정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취업전교육을, 이직근로자에게는 사업장적응교육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6 개 언어로 상담서비스, 한국어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쉼터,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44 곳에 예산을

지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기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출입국, 복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예산을 지원했다. 법은 국내에서 적어도 1년 근무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이주노동자는 출국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했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은행규정이나 지급을 지연하는 고용주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시민단체들은 출국한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 19 감염병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다고 확인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수가 많은 농업·축산업·어업의 경우, 법이 근무시간, 공휴일, 수당 규정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현지 근로자와 비교하여 장시간 근로, 적은 휴일 일수, 낮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고용주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민들이 처한 열악하고 가혹한 근로여건 보고에 대해 가끔씩만 조사했으며 법원으로 간 사례는 증거불충분으로 자주 기각되었다.

시민단체들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했고, 플라스틱 판넬로 제작된 열악한 숙소를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8월, 경기도 산양저수지가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한 후 약 1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80 퍼센트는 저수지 인근 농장에서 일하면서 비닐하우스 집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바쁜 일로 인해 임시로 사용하는 숙소일 뿐이라고 합리화했다. 근로자 권리 옹호운동가들은 비닐하우스 집이 불법이라 주장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정하며, 업계가 이를 준수하는 지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부문의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을 위협받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7월 현재, 법 시행의 책임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간접적으로 299,081 곳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처벌은 중대과실과 같은 유사 범죄와 비슷했다.

1 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시행되었다. 개정에는 작업장 사망사고시 더 많은 벌금, 안전보건법 위반시 더 강화된 처벌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은, 납과 같이 유해한 중금속을 사용하는 도금작업 등, 위험한 특정 작업을 기업이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9 년 산업재해 사고는 109,242 건으로, 2018 년 대비 6.8 퍼센트 증가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 명으로, 2018 년 2,142 명에서 감소했다. 공단 이사장은 사망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근로자, 여성, 이주민, 소규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 산재·건강위험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회사와 하청업체 간의 안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도전과제라고 시인했다. 근로자 권리 운동가들은 계약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들 역시 작업장 부상에 취약하다고 했다.

2019 년 9 월부터 2020 년 5 월까지, 세계 최대 조선 회사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5 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지원이 부족했고,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에 관해 직원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7 월 감독 이후,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위반 165 건으로 과태료 1 억 5200 만원 (13 만 1000 미국달러)를 부과했다.